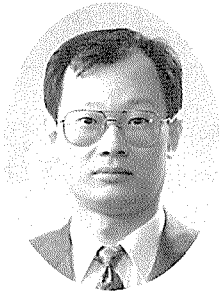




가격 자유화와 석유산업 경쟁력



문 영 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 경제학 박사 〉

97

년 1월 1일은 우리 석유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10여년 이상 논의만 되어 왔던 유가 자유화가 실제로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로 석유제품가격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행사해왔던 가격 결정권이 실제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정부는 이를 감시 관찰하는 기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제 유가 자유화 시행기간이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문으로 갖고 있는 점을 요약하면 과연 유가 자유화체제는 정착되었는가? 되었다면,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이며, 아직 확실있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1년을 맞이하면서 중간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이야기되어 온 것을 정리해 보자.

유가 자유화는 처음에 우려했던 혼란상황, 예를 들면 극심한 파괴적 가격경쟁이나 유통부문의 혼란상은 거치

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관찰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은 불행히도 석유제품 원가의 가장 큰 요인인 국제유가 및 환율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인상의 경우가 인하의 경우보다 많았다.

하지만 정유사 및 유통업체의 경영상황은, 정유사의 경우는 유가자유화 직전 년도인 '96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타제조업종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주장이고,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주유소 단계의 경쟁이 전보다 심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 어린 주장이 많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감시자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편이다. 명실상부한 가격자유화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가격견제기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었던 가격사전보고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실질적으로도 정유사가 제품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자유화 초기의 파괴적 가격경쟁 가능성이나 담합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시장가격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과도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유가 자유화는 비록 속도 면에서는 일거에 실질적인 자율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을 망정, 조심스럽게 제도 자체가 의도했던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 및 최근의 환율상승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정유사 및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제도 변화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원활히 가격 자유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현실진단을 근거로 보다 어려운 문제인 대외개방 및 정제업 신규진입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석유산업의 전망에 대해 언급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석유산업도 구조조정에 접어들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교가 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산업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가격 자유화의 측면에서는 석유산업보다 앞서 있고 대외개방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실정에 있다. 과점체제인 것, 내수시장을 두고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중요한 차이라면 석유산업 보다는 훨씬 수출지향적인 경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이 지금 신규진입과 대외개방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과점체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여파가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실정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석유산업의 입장에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함은 분명하다.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서까지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석유산업의 사업환경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상하는 이유로는 우선 수요조건 변동의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수요는 이미 폭발적 수요증가기를 지나고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음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실해지고 있다. 수요전망위원회가 최근의 수요증가율 둔화추세를 반영하여 작성한 1997년 장기석유수요전망(안)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3.7%, 2000년 이후는 2.4%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앞으로 석유 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석유가격을 OECD 비산유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석유제품 세율 조정에 의한 석유가격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석유 수요 증가율의 둔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석유산업의 수익성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규진입과 대외개방은 기왕에 과잉상태인 석유시장의 수급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산업인 석유산업의 특성상 정제마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전반적인 금융·외환 사정 악화와 맞물릴 경우 석유산업에도 구조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최악의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더라도 향후 석유산업의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가격 자유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개방이나 신규진입허용은 오히려 이들을 촉진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과점담합가격이나 정부관리가격은 그 속성상 기존 시장참여자들을 배척하기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장에 진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자체의 경쟁력 보다는 기존 기업의 수익성에 맞추어지기 쉽다. 즉 잠재적 신규참여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기업들이 과점 이윤이나 정부가격에 의해 초과이윤을 허용 받고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 시장이 경쟁체제에 의해 움직이고 기존 기업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정상이윤을 얻고 있다고 보게 되면, 잠재적 신규 진입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경쟁력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정부가 가격 자유화를 신규진입자유화 및 대외개방 이전에 추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이제 1년을 앞두고 있는 가격 자유화체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며, 불필요한 신규진입 및 대외개방의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다.

결론지으면, 석유산업의 과제는 먼저 가격 자유화를 명실상부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면 목표(실제로는 가격자유화 역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임)이고, 이 과정에서 업계는 감량경영과 비용 효율적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가격자유화의 정착과정에서 가격경쟁과 경쟁력이라는 양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가격자유화 체제란 업계 구성원 각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확보된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서 상대방과 가격경쟁을 하여 보상을 받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